

[기윤실 토론회]

## 새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3

- 일시 : 2017년 6월 8일(월) 오후 7시 ~ 9시
- 장소 : 평화다방

시간	주제	담당자
19:00 ~ 19:10	토론회 취지, 순서자 소개	박진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19:10 ~ 19:30	청년이 바라본 갈등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 간사
19:30 ~ 19:50	청년은 말할 수 있는가 : '갈등' 없는 '통합담론'에 대한 비판	장운영 청년연대은행 토닥 활동가
19:50 ~ 20:50	종합토론 / 질의응답	다함께 (사회 : 박진영 팀장)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발제 1.

# 청년이 바라본 갈등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건립위원회 간사)

### I

이번 발표를 맡고 우선 검색부터 해봤다. 한국사회의 갈등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각종 기사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활발하게 한국사회의 갈등을 강조하는 부류가 경제인이라는 것이었다. 애초에 사회갈등지수라는 것을 개발한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은 한국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얼마이며, 한국이 OECD 평균의 사회통합지수를 가지게 될 때에는 일정 %의 경제성장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느냐 못 들어서느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사회를 통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돈 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이들의 명쾌한 설명이라 하겠다. 그리고 발표자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꽤나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계는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계량적 방식으로는 갈등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계산에 절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련의 기사들을 검색하며 어떤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누군가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과 그가 기득권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 비례한다는 느낌이 그것이었다. 몇 시간의 기사 검색을 마치면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짓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여다 본 기사가 기윤실이 대선도 치르기 전인 4월 20일 "국민통합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주권", "적폐청산", "세월호 진상조사" 등의 이슈가 사회를 압도하고 있던 시점에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기윤실의 용기를 칭찬해야 마땅하겠으나 기윤실 스스로 자신들의 스탠스를 한번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 II

자연스럽게 들었던 질문이 있다. 그 무수한 기사들이 당연한 듯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의심이다. "한국사회의 갈등이 치유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등등의 말말이다. 왜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가? 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가? 왜? 누구 좋으라고? 기본적으로 발제자

는 갈등을 마치 위험한 것이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갈등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자 다양한 인간들이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갈등은 실존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존재 이유이다. 인류 사회는 갈등을 통해 발전해 왔다. 또한 갈등은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이 구조 안으로 편입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언제나 극심한 갈등 없이 역사가 획기적으로 진보한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높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편으로 반갑기까지 하다. 우리가 OECD 국가 중 전향적인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III

한국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사회 구성원 내의 갈등이 언제나 터부시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구한말 한국에 유입된 민권의식은 곧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구한말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인권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무지한 민중이 인권을 알고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면 민족 내 갈등이 촉발되어 일제로부터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사전적으로 '민권'은 개인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권'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을 단위로 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면서 개인이 가지는 애국적 의무와 연결되었다.

해방 이후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다. 한국 민권운동의 금자탑으로 이해되는 4.19 혁명에서도 유사한 성격이 발견된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유서에는 심심치 않게 '민족의 제단에 나의 피를 바치겠다'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4.19 이후 학생들이 일으킨 신생활운동이 개인주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 통용된 민권이라는 말이 지향하는 집단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의 한국에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주체적 개인의 발견은 1970년대 중반으로 미루어졌다.

“일찍이 19세기말부터 한반도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 역사의 이름으로 호명당해 왔을 뿐, 자신의 자유, 자신의 행복을 주장할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던 것이다. 국망의 위기에서 일어난 애국계몽운동도, 식민지시기의 독립운동도, 일본제국주의의 총동원체제도, 그리고 해방 이후 이념대립과 전쟁도, 한결같이 한반도의 주민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개인주의'를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는 4·19혁명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거기에 저항했던 세력들도 구체적인 수준, 현실적인 실감,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다.”<sup>1)</sup>

오늘날에도 한국사회 내의 갈등을 “남남갈등”이라 지칭하는 이들이 있다. 이 위험한 단어는 분단 상황을 등에 업고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마땅한 움직임을 북한과 연결시켜 위험한 것으로 낙인찍는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등장한 저 유명한 말, “큰 자유를 위해 작은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참기 힘든 것을 참아내는 지혜를 발휘해라”가 여전히 기능하게 만든다.


1) 이정은, “해방 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179-180.

#### IV

청년이야기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존재다. 젊은이들이 그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버릇없고 무례하게 그러서는 안 되는 법이다. 벌써부터 자기 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청년들의 자기주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때는 그 주장하는 바가 공익에 기초하거나 사회 정의를 요구할 때 뿐이다. 그나마도 진실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때에야 비로소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하지만 일반적이게도 청년들이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는 도덕적 부담감이 존재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청년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청년이 일으키는 갈등은 너무나 손쉽게 진압 당한다. 모 정치인의 “그냥 참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암튼 방법이 없어요”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셈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한국사회에 세대갈등이 심하다는 엄살이 들린다. 지역갈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대갈등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견이 사방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세대별 차이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세대갈등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세대갈등으로 치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어느 쪽이든 세대갈등을 위험요소로 파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발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에는 세대간 불평등은 극심하나 오히려 세대간 갈등은 미미하다. 취업률, 평균임금, 대 사회적 관계 등에서 청년들이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청년들이 장년과 노년층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다. 청년유니온이 노년층 일자리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청년위원회가 당사를 점거하고 기존 의원들의 의석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앞서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사회 구조안의 주체로 편입되는 방편은 갈등뿐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오늘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세대갈등이 절실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대갈등은 당연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미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현 청년 세대에게 사회갈등 요소가 즐비한 한국의 상황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한다. 지금은 청년들이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고 통제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이다. 

## 발제 2

# 청년은 말할 수 있는가

## '갈등' 없는 '통합담론'에 대한 비판

장운영 (청년연대은행 토닥 활동가)

### 청년정체성으로 말하기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패널로 초청될 때에는 토론회에서 재현해 주기를 원하는 청년의 모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이다. '시대의 증언' 같은 거라고나 할까. 둘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획의 공통점은 청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청년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토론회에서 기성질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나, '이번 생애는 망한 것 같아'라는 자조의 목소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모 정당에서 기획한 청년간담회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내용인즉슨 간담회에 참석한 현직의원들이 청년들의 날 선 비판에 그만 발끈하고 나서 한판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부끄러울 말 것을. 혹자는 이러한 일들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예외치고는 빈도수가 너무 높다. 당장 지난달만 하더라도 필자가 참석한 청년대담 행사에서 내외 귀빈 한 분이 마이크를 요구하더니 청년참석자들을 향해 일장훈계를 늘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다. 발제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안의 디테일이 아니라 왜 누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이다.

권력이란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이 사회에서 청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이며 어른(대개는 성인남성)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대갈등이라고 부르는 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지정한 경계를 '감히' 이탈하는 바람에 생기는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불편함일 때가 많다. 세대갈등 프레임은 나이주의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경계를 지정하는 힘을 가진 주체와 그러한 힘을 가지지 못한 객체 사이의 불평등함을 민감히 인식하는 쪽은 언제나 힘이 없는 쪽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을 논하는 자리라면서 청년을 위한 토론섹션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문제적'이다. 오늘 토론회의 패널들은 역사학자 또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청년이라는 정체성으로 말하기를 요구받았으며, 이러한 말하기는 패널들의 주장을 보편이

아닌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전락시킨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리가 필요한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말이다.

### 국민통합은 누구의 기획인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통합'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이 현실 세계의 복잡다단한 권력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갈등의 해결이라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자칫 소수자의 주장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통합'은 그 자체로 획일화의 폭력성과 다양성의 상실을 내포하고 있는바, 통합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해서 유통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사회가 기존질서에서 누리던 권력을 해체하고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라는 단어도 허구성 짙은 말이다. 국민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한반도에 거주하면 국민이 되는가. 그렇다면 재외동포는 국민인가. 대한민국 국적의 유무가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를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제1의 원칙으로 하는 나라에서 나이로 인해 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국민(청소년),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국민(장애인), 성적지향에 의해 영창에 들어가 있는 군인(성소수자)은 얼마만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국가통합'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던 독재정권을 경험했다. 이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조정의 시기를 거쳤다. 그리고 드디어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 이윽고 민주정부 10년을 잇겠다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민주화와 권력분배의 관점에서 현 정권의 탈권위주의적 행보는 이전 정권과 비교해 놀랍기 그지없다. 특히 여성장관 30%의 공약과 51살의 '젊은' 비서실장 인선은 많은 사람을 고무시켰다. 이 밖에도 '광화문 1번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끊임없이 말해져야 하는 사실들이 있다. 가령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세 미만 국회의원의 수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30대 미만 가구주와 50대 가구주의 자산규모는 이미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sup>2)</sup>(미혼 및 비혼 청년 인구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1964년 이래로 전 국토의 지가는 2,976배 상승했는데 지가상승의 부담은 가장 뒤늦게 사회에 진입한 세대가 오롯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sup>3)</sup>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떠들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국가통합'을 기치로 내걸던 지난 정권의 행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2) 2016년 기준으로 30대미만 가구주 평균자산은 3,282만원, 50대는 4억 4천 302만원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3) 조태형 외 3인.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한국은행, 2015. 11. 22쪽.

‘국민통합’의 비전뿐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담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프레임은 멸공을 외치던 때나 지금이나, 교회 밖이나 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기독 시민사회와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거대 담론 안에 함몰되는 개별적 존재들의 주체성을 심각히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교회 밖에서 연일 계급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이 이슈화되는 현상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존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주체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자. 이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 내 갈등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사이에서 일어난 적은 있어도 갈등의 주체가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인 경우는 없었다. 아마 한국교회가 성인남성만 사람으로 계수하는 성서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말할 수 있는 권력과 그로 인해 파생하는 갈등은 장년 남성 사이에서만 전유 되고 있다.

나는 한국교회가 가부장제적 조직문화의 후진성을 인정하고 성찰하기 이전에 대 사회적 역할수행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청년들을 교회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의결기구인 당회 및 총회에 청년대표의 자리를 보장하는 할당제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교단 불문하고 따르고 있는 장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나이, 성별 등 외적인 장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장로임기제’ 또는 ‘호칭장로제’ 등 장로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사역자들 내의 불평등한 처우와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위의 제언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교회 내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속해 있는 교회의 변화를 고민하며 가슴 아파 하는 청년들에게는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대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년남성들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거나 때때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한다면 나이권력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할 것이다. 어쩔 때는 교회를 뛰쳐나오는 행동이 가장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이 사회가 청년들이 출산율과 사회 재생산이 안 되는 문제에 그토록 민감히 반응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앞으로 당신과 나는 기존의 정치질서, 경제질서에 균열을 내고, 갈등다운 갈등을 빚어낼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너무 힘이 들 때면 예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하자. 나중에 온 우리들이 요구하는 몫이 정당한 것임을 기억하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더 나중에 사회에 진입하는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자. 교회 안팎에서 세대 간 갈등은 더 치열해져야만 한다. 그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걸 어떡하겠는가.

